

직접시공 의무 공감하지만 대상 확대는 반대

기사입력 2012-12-13 08:00:15 |

폰트  

전문업계 590곳 설문, 발주기관 선택 맡겨야

/적심공사 직접시공 비율 평가는 찬성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정부가 검토 중인 직접시공 의무제 강화안에 전문업계가 반발할 기세다.

제도 당위성에는 3곳 중 2곳꼴로 공감했지만 일방적인 의무제 강화나 대상공사 확대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1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문건설사 5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도급자의 자기 인력·자재·장비 투입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직접시공 의무제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72%(꼭 필요하다 13.80% 포함)로 불필요하다는 의견(25.21%)의 3배에 달했다.

원도급 주력 하도급사(82.45%), 원하도급 병행업체(72.19%)는 물론 하도급 주력 전문건설사(64.61%)도 3곳 중 2곳 이상이 직접시공제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해 강구 중인 직접시공 의무제 강화안(직접시공 예외사유 축소, 적심 때 직접시공 평가항목 추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건설공사의 분업화, 전문화를 저해하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14.02%)이 모든 공사에 의무화하자는 답변(7.32%)의 2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제도개선 방향은 발주자가 공사 특성을 고려해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의견(28.24%)이었다. 향후 몇년간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확대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15.69%), 의무화를 유지하되 직접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제재하자는 의견과 전문업자가 원도급 자격을 갖는 경우에 주로 적용하자는 의견(각 11.82%)이 뒤를 이었다.

유일한 책임연구원은 “2006년 직접시공 의무제가 시행된 후 6년이 흘렀지만 그 효과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었다”며 “수행할 물량의 증감 예측에 따라 원하도급사 입장이 엇갈리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주관적 생각일 뿐이며 제도 개선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액 단위의 구분(50억원 미만 공사 대상)보다 공사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했다. 직접시공 의무제 적용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 응답자의 55.46%가 공사업종에 따른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공사 규모 기준의 운용에는 30.20%만 찬성했다.

직접시공 적용 적합공사로는 대규모 공사(43.97%)가 현행 소규모 공사(21.72%)를 능가했고 입찰방식 면에서도 기술제안입찰(26.74%), 최저가공사(24.49%), 턴키·대안공사(13.71%) 적합의견이 현행 적심공사 적합 의견(12.58%)을 능가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부실건설사 퇴출책으로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기 어렵고 정부가 강행하려 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도 정부의 다른 대안인 적격심사 때 직접시공 평가항목 추가 방안에는 긍정적(찬성 64.28%, 반대 25.98%)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